



民의 자리에서 온다!

양돈할 땅은 좁고 일할려고 하는 사람도 적고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우리가 사는 현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TV에서 일반시민과의 인터뷰가 나오면 대부분이 과소비는 나쁜 것 같애요. 국산농축산물을 먹어야 될 것 같애요. 전세값이 너무 오르는 것 같애요라고 자신없는 애매한 답변들을 한다. 나쁘면 나쁜 것이고 전세값이 올랐으면 오른 것이지 같애요라는 확신없는 대답이 답답할 따름이다.

말이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표현하려 할 때 그 뜻이 불확실해지고 이해가 어렵게 된다.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사과하라고 하니 통석(痛惜)의 뉘(念)이란 표현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다보니 갈피를 잡기가 힘들게 된다.

정부가 축산장기발전대책을 내놓았는데, 2000년에 가서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윤곽이 희미하다. 2000년에 한국양돈산업을 이렇게 만들자 라고 하기 보다는 2000년에 한국양돈산업은 이렇게 될 것 같애요 라고 들린다.

덴마크나 화란처럼 자급이 아닌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처럼 적당량만을 생산하고, 현재 쇠고기처럼 나머지는 수입할 것인지 명확치가 않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달려가도 경주에 이길까가 의문인데 목표가 불분명하니 갈 지(之)자로 달릴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동안 양돈인들은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육성되고, 전업 중심의 협동조합이나 육가공업체 중심의 계열생산체제로 지금의 덴마크와 비슷한 형태로 발전하리라고 상상해 왔었다.

그런데 지난 5월 25일의 정부발표는, 지속적인 돈육수출과 육가공산업발전을 위해, 육가공원료로 수입하고 저 할 때에는 수출한 물량만큼의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돼지값이 140,000원 이하로 떨어

정부에서 현재 양돈업계의 어려움을 올바로 파악하지 않은채 일본형 양돈을 모델로 정책을 수립한다면 급속한 생산 기반이 무너져 면화나 소맥처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우처럼 자급율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지면 중단하고,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수급면에서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개월전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일시에 홍수 수입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양돈농가의 불안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양돈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있다. 돼지고기 수출국이라는 양돈인의 희망사항이 돼지고기 수입국이라는 절망사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우리는 오동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오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 미국의 타구팀이 북경에 친선경기 차 방문하는 것을 보고, 두 나라의 국교관계가 개선되리라는 것을 예측했었다. 28일 판문점에서 4구의 미군 시체가 북한측으로부터 미국측에 인도되는 것을 보고 미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점친다.

육가공용 원료수입 그것도 한시적 조치를 보고 양돈인들은 2000년 아니면 1997년의 한국양돈을 그려본다. 양돈인들의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분명한 정부의 의지 발표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5.25조치는 지속적인 수출보다는 육가공산업의 지원쪽에 초점이 두어졌다. 이미 기업축산의 수출의무량 부과가 금년말까지 유보된 상태이고, 수출을 촉진하려면 관세환급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여 주든가, 아니면 도축세 면제나 금융지원 등의 방법이 효과적인데, 이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육가공업체에 대한 지원도 6~7개월 전 폐지값이 바

낙세일 때 비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 법이었으며, 통조림, 소시지가 수입개방된 상태에서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지난 1년간(89. 3에서 90. 3월) 32%의 양돈농 가가 탈락하는 불황을 딛고 아직 빚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이번 조치가 이루어져 쟁燹할 따름이다. 육가공산업이 양돈산업 발전에 절대 필요하지만, 수많은 양돈농가의 탈락 때 보여준 정부의 관심에 비하여 3개업체가 가공품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업체에 보여준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양돈업계의 어려움을 올바로 파악하지 않은채 일본형 양돈을 모델로 정책을 수립한다면 급속한 생산 기반이 무너져 면화나 소맥처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우처럼 자급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2차산업이야 세계시장은 넓고 할 일도 많겠지만, 우리나라 양돈업은 양돈할 땅도 좁고, 일 할 사람도 적으며, 유통의 불합리, 분뇨의 처리문제로 잦은 구속, 가격 불안 등 기회만 오면 전업하고 싶은 심경에서 수입허용은 가격안정보다도 생산기반 붕괴의 역기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축적도 안되고, 금융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인력 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계화 등 농장과학화 시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격이 된다.

앞으로 출하물량의 증가와 비수기를 앞두고 취해진 이번 조치에 대한 정부의 배경설명과 앞으로의 정책목표와 이를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 돈가안정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